

**폐수 재이용을 높이면 부담금 감면  
- 10월부터 하루 2천t 이상 배출업체 대상 -**

빠르면 금년 10월부터 하루 평균 2천t 이상의 산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체는 배출량 재이용 정도에 따라 수질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고 수질오염부하량 감소로 수질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산업폐수의 재이용률에 따라 수질부과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2일 밝혔다.

현재 전국 3만7천6백여개의 산업폐수 배출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량은 지난 98년말 현재 하루 평균 406만 8천t으로 이 가운데 261만4천t이 하천이나 호소등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폐수의 재이용률은 전체 발생량 가운데 43%인 175만5천t에 불과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배출량 가운데 60%(156만t)를 차지하는 1종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질부담금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재이용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우선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24개 업체를 선정해 수질부담금 감면제도를 시범시행한 뒤 효과가 좋으면 2002년부터는 전국의 대형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감면혜택 범위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공측면에서는 수질개선효과 외에 용수사용량 감소를 통해 댐 건설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업으로서도 오염물질 처리비용, 수도·전기요금 등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업 이미지를 심을 수 있어 공장입지 선정 등 여러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 빠르면 이달 중순께 입법예고, 규제심의 등 관련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질부담금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에 대해 지난 83년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연간부과액은 50억~60억원 규모다.

**대기오염물질 피해 농민에 배상금  
원료·연료 대체-시설개선 등 조치 명령도**

공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벼농사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시평)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공단 내 G사, S제지, K제지, Y산업 등 4개 입주업체에 대해 인근 농민 30명에게 모두 2천 539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3월 17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앞으로 인근 논외의 벼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원료와 연료를 바꾸고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분쟁조정위는 경북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배출한 이산화황,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등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달성 현풍·유기면 농지 3만여평(9만6천502㎡)에서 재배중인 벼의 수확량이 21~26% 감소하고 쌀의 품질이 떨어졌다는 농민 김모(55)씨 등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현풍공단 내 6개 업체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질도 떨어졌다면서 작년 9월 업체들을 상대로 모두 1억1천331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신청을 냈다.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이번이 두번째로 현풍공단 입주업체들은 지난 95년에도 인근 2만2천평(7만1천334㎡)의 논에서 자라던 벼의 생육 부진에 대해 모두 1천900만원을 배상한 적이 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공단 내 입주업체들은 원료와 연료를 사용하는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유사한 경우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영세 환경산업업종 통합업 추진  
-모든 과징 중괄관리 '물서비스제' 유도**

환경산업의 중점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환경산업 업종

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한국의 환경산업이 규모의 영세성, 기술수준 저조, 연구개발 투자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환경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관련업종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25일 밝혔다.

환경부를 이를 위해 현재 세분화된 환경산업 업종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오염물질 사후처리에서부터 오염원별 기초조사, 설계·시공·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관리하는 '풀서비스' (full service) 체제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업의 전문성, 다양성,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환경산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경영 평가, 환경현황 및 환경영향 조사, 환경자료조사·통계·분석, 분쟁해결 등 환경컨설팅산업도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벤처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실용화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신기술의 수요창출 및 신기술 사용활성화를 위해 현장 시공실적이 없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성공 후 대가를 지불하는 '성공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가 2008년에는 1조29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환경업체들이 영세하고 기술수준 역시 선진국의 30-40%에 불과하다"면서 "고부가가치를 가진데다 지식산업인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종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산업 신중 유망산업으로 육성  
-정부지원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키로**

환경산업이 21세기 신중유망산업으로 중점 육성된다.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지난 3월 17일 오후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을 21세기 신중유망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적 환경 산업업종인 오염 방지시설업체의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4백여 개나 되는 등 관련업계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환경산업과 관련된 관리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중복투자나 이중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환경부 소관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85억원으로 전체 투자의 0.9%에 불과하고 특히 산자부(7천158억원), 보건복지부(860억원), 해양수산부(577억원) 등 타부처에 비해서도 크게 적어 환경기술 개발이나 보육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산업체들의 영세성 때문에 정보유통이 빠른 인터넷 기반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다른 업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재경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여해 범정부적이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산업업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현재 각 부처별로 세분화돼 있는 환경산업업종의 통폐합 등을 통해 오염원별 기초조사, 설계·시공·운영·관리 등 모든 과정을 총괄관리하는 체제로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망환경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관련업체나 단체들에 각종 정보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술개발이나 실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과 관련, 김 장관은 국내의 유관정보망과 연계한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망을 구축해 최신 실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신기술 수요 창출 및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계구축과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확대 등을 통한 국내환경시장 수요창출 ▲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대외홍보 강화 ▲ 해외환경시장 및 기술동향 등의 정보 수집·전파 ▲ 국내 환경업체의 개발도상국시장 진출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환경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추진

환경부와 과학기술부는 정부 주도의 'G-7프로젝트'의 후속사업인 '21세기 환경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3월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모두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이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환경연구개발분야의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기술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10년 동안 모두 1천억원을 투자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기물자원화 및 재활용기술개발사업과 관련, 두 부처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해 폐기물에서 경제적으로 유용한 원료물질을 회수하는 한편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연구개발 사업분야에서도 두 부처가 중복연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동추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 스티로폼 재활용률 해마다 급증

그동안 버리는 것으로만 인식돼온 스티로폼의 재활용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면에서도 새로운 '효자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19일 환경부와 한국발포스틸렌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스티로폼의 사용량은 지난 95년 20만9천200t, 96년 21만4천720t, 97년 21만8천583t으로 계속 늘어났으나 국제 통화기금(IMF)사태로 인한 기업체들의 연쇄부도 등으로 98년에는 13만7천482t, 99년 17만4천426t으로 줄어들었다.

또 스티로폼이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95년의 재활용률은 1만420t에 불과했으나 96년 1만3천280t, 97년 1만6천889t, 98년 1만6천12t, 99년 2만 4

천 371t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스티로폼의 재활용률 역시 지난 95년에는 26%에 머물렀으나 96년 58.3%, 97년 36.3%, 98년 41.9%, 99년 48.8%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재활용은 3m높이에, 면적 89만8천200평 규모인 쓰레기매립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스티로폼 재활용률이 증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1천25억원을 절감했으며 이를 이용한 합성목재 생산으로 소나무 58만7천그루의 산림자원을 보호한 효과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스티로폼을 재활용한 상품의 수출실적도 작년에는 재생수지 170만달러와 그림액자 730만달러 등 모두 90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스티로폼 쓰레기 발생이 많은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수거율을 더욱 높여 재활용 범위를 확대할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개발사업 초기부터 환경평가 -시화호 오염처럼 대규모 피해 방지위해

환경부는 대규모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형국책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시화호 오염의 경우처럼 무차별적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돼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주요 개발사업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의뢰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주요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사전에 봉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화호방조제 조성사업, 새만금간척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그동안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염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왔다.

**하수처리사업 민간참여 확대 추진  
수질오염억제-낙후 관리체제 개선키로**

환경부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역의 하수처리사업을 조기에 추진, 수질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낙후된 관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본유치와 선진경영기법 도입을 추진하는 등 민간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부산, 인천, 경기 전남 등 4개 지역 20개의 하수처리시설·건설사업에 필요한 1조2천919억원 가운데 7천774억원을 민자로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사업비의 절반 가량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자유치계획과 관련해 부산시의 경우 동부하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1천576억원 중 1천418억원이, 1천157억원이 소요되는 영도하수처리장사업에도 1천418억원이 각각 민자로 유치된다. 또 모두 466억원이 들어가는 반송하수처리장 사업 역시 419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기로 했다.

송도, 만수, 검단 등 3개의 하수처리장 건설에 모두 3천393억원이 필요한 인천의 경우에도 사업비중 3천301억원이 민자로 마련된다. 평택 장당·통북, 안산, 남양주, 파주 금촌·문산, 안성, 화성 봉남·마도·향남·남양·조암·동탄 등 6개시·군에 모두 13개의 하수처리장 건설·중설 사업에 6천862억원이 필요한 경기도 역시 1천593억원의 민자를 끌어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화순군 남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46억7천만원 가운데 14억원을 민자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하수처리장을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전문기술 부족, 인력확보난, 효율성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하수처리장은 150개(일평균 처리능력 1천771만 1천t)로 이 가운데 부산 해운대처리장 등 31개만이 민간에 위탁관리되고 있다.

**환경부 하수처리수 재활용 늘린다**

지금까지 하천 등에 버려지던 하수처리장의 처리수가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된다.

환경부는 하루 평균 1천771만t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 가운데 현재 2.5%(44만t)에 불과한 재이용률을 2002년 3.8%(67만t), 2005년 5%(89만t)로 높이기로 했다고 지난 3월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현재 하수처리장 침사지 등 세정용수 등에만 처리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세척수와 청소수 등은 모두 처리수로 쓰기로 했다.

또 일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대도시나 물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지역순환시스템을 도입, 처리수를 인근 가정의 화장실 용수나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할 경우 중수도 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하수처리수의 재이용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하수도법령에 처리수 재이용규정을 명문화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과 하수도 시설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